

행정소송 느는데...광주 자치구, 상근 변호사가 없다

지원자 없어 행정 변호사 '공석'...자치구별 소송 매년 50여 건 달해 고문변호사에 의지하다보니 적극 법률 대응 어렵고 사건 처리 지연 현장 수입료 밀도는 연봉에 약성 민원 다양화 등 원인...갈수록 기피

광주 일부 지자체가 '상근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갈수록 증가 추세여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고, 적극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상주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7월 상근 변호사가 사임하자 4차례(7월 29일, 8월 19일, 9월 19일, 10월 31일)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한 건의 지원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구인 당시에도 6개월이 걸리

는 등 공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다. 서구 역시 지난 6월 상근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2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광산구도 2022년 4월 상근 변호사 공석 이후 고문 변호사에 의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상근 변호사를 모집할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구와 남구는 고문 변호사 2명만으로 소송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상근 변호사는 지자체 현안 업무 법률상담과 자문, 행정심판과 직무 관련 사건 등 소송을 담당한다. 약성민원 법적 대응, 자치법규 검토와 법

령 해석 등도 맡는다.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자치단체 법무팀에 상주하며 지자체 업무만을 맡는다는 점에서 고문 변호사와 다르다. 고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업무와 겸업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소송 업무를 건별로 맡아 처리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고문 변호사의 경우 개인 변호 업무가 우선해 지자체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잦은 출장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상근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다. 상근 변호사는 지자체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직원 만족도도 높고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게 지자체 직원들의 평가다. 최근 늘어나는 행정소송도 상근 변호사를 원하는

한 이유다.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경우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수입비가 추가로 들어 예산낭비도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광주 5개 지자체에서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진행되거나 완료된 소송은 동구 333건, 서구 312건, 남구 201건, 북구 202건, 광산구 179건이다. 이들 지자체는 변호사 선임비로만 5억 6470만원 썼다. 구별로는 동구 1억 7304만원, 서구 8352만원, 남구 2227만원, 북구 8577만원, 광산구 2억 10만원이다. 선임비와 별도로 자문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5년간 1억 728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상근 변호사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급여다. 상근 변호사 연봉은 5000~8000만원 선으로 현장 변호사 수입비에 비하면 적다. 매년 법률사무외에도 고정적인 행정업무, 약성 민원의 다양화로 업

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의 상근 변호사의 경우 지원자가 많은 반면, 기초자치단체 상근 변호사의 경우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등을 주로 다루 추후 경력에 변호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등에는 변호사 지원자들이 많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행정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역변호사들은 전한다. 지역 변호사는 "지자체 상근 변호사의 경우 승무업무 이외에도 추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한다"면서 "연봉 또한 실질적으로 높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업무를 맡게 한다면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걸으면 건강해져요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열린 '다함께 건강 걷기 데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충효동 호수 생태원 데크길을 걷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법원, 내년부터 지역인재 우선 채용

2025년부터 광주고등권역(광주·전주권) 법원 9급 공채 채용시험에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지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제공 등 사법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국단위 선발 방식으로 채용해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들

우선 배치한다. 지역선발로 공백이 생기면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장애인·저소득층과 등기 사무·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 선발 방식이 유지된다. 지역의 구분은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춘천 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 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제주 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되면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대생 휴학 처리엔 전남대 24억 반환·이월 '부담'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0개 국립대에서만 휴학으로 170억원가량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거나 복학 후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휴학 승인 예정 인원 651명)는 24억7163만원에 달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법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법인)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총 170억1965만원의 등록금 수입을

반환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각 대학 학칙에 따르면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시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 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을 당장 뱉어내야 하거나 쓸데 쓰지 못한 채 의대생이 복학하는 내년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별 이월 또는 반환 예정 등록금은 경북대 21억2132만원, 부산대 18억3547만원, 전남대 24억7163만원, 전북대 28억1840만원 등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막말' 임현택 대한의사회장 취임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회장 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

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연합뉴스

수거 차량 참변 유가족 "아파트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안전관리 관련법 개정 촉구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전자정원 게시판에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7일 올라왔다. A양의 유가족은 이 청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고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작업했

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이에 대한 제지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고, 폐기물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보호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아파트 설치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졌다. 수거차량은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 업체 차량이었다. 방과 후 귀가하던 A양은 자신의 집 앞에서 후진하는 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정읍시

정읍의 맛 쌍화차

찬바람 불면 정읍 쌍화차로 건강 챙기세요!